

# IMF 경제위기로 인한 환경분야의 변화

우수상

전체목차

1. IMF관리체제하의 한국경제와 환경
2. IMF구제금융이후 경제적 변화와 환경에 대한 영향
  - 1) 생산 및 소득의 하락
  - 2) 가격구조의 변화
  - 3) 투자 및 소비지출의 변화
  - 4) 산출구성의 변화
  - 5) 환경예산 추이와 민영화
  - 6) 지방정부 재정의 위기
  - 7) 정부의 환경정책 변화
3. IMF 구제금융 전후 전반적인 환경상태 추이
4. IMF와 부동산 규제완화정책
5. IMF시대의 환경운동
6. 결론 : 제언



김 타 균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NGO학과

## 4. IMF와 부동산 규제완화정책

기업들은 자신의 부실경영이나 무분별한 확장과 방만한 투자 등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체계적인 구조조정을 뒤로 미룬 채 하위 임시직들을 우선 해고 시킴으로써 실업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외국 기업에 대한 국내시장의 완전개방과 이들에 의한 국내기업의 적대적 M&A허용 등 외국자본을 무조건 유치하고자 하는 그 효과에 대한 체계적 타당성 검토없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우려되는 점은 수렁에 빠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부동산 및 환경에 관한 각종 규제완화책들이다. IMF이후 정부가 발표한 토지관련 주요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 그린벨트제도의 전면 해제 조치 : 그린벨트 제도

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주변의 녹지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1971년 처음 도입되어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부터 지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28년간 기본틀을 유지해 왔다. 현재 전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km<sup>2</sup>가 그린벨트로 개발이 제한(건축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도시계획사업 등 도시개발 행위의 금지)되어 있으며, 이 구역안 2,489개소의 집단취락지구에 214만 가구, 742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그 동안 해당 지역내 주민들의 불만과 40여 차례에 걸친 부분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틀이 유지되어 왔다는 점에서 국토 도시환경에 관한 정책들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정부의 그린벨트 제도개선안은 지방 중소도시권은 전면 해제하고, 나머지 7개 광역도시권은 40% 가까이 대폭 해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그린벨트제도를 폐기해 인구집중과 수질 및 대기오염, 그리고 교통란 등을 겪게 될 것이며 부동산 투기와 무질서한 개발에 휘말리게 될 전망이다.

- 외국인 토지취득제한 폐지 및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개발 : 정부는 지난 98년 4월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자율화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에 따른 각종 제한이 완전 폐지되어, 외국인은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관계없이, 국내 업무용은 물론 비업무용 토지까지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을 지정하고 입주 외국인 업체에 대해 법인세 등 각종 조세를 대폭 감면하는 것을 골격

으로 한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각종 철새들의 서식지를 파괴하여 건설중인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설 영종도 일대 바다를 매워 6천만평 규모의 국제 투자자유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으로 토지 매매를 활성화시키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땅값 상승이나 투기 우려가 많아 허가구역으로 묶어두었던 지역에 대한 거래규제를 완전히 해제했다. 이에 따라 전국 토의 33%(32,633km<sup>2</sup>)에 달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난 98년 1월 중부터 3.3%(3,261km<sup>2</sup>)로 줄어든 데 이어, 같은 해 4월의 조치로 완전히 해제되었다. 4월 마지막으로 풀렸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토의 3.3%이나 대부분 택지개발지구 주변 또는 고속철도 정차역, 산업단지, 인천국제공항 건설지역, 그리고 시·도지사 건의지역 등 각종 개발사업지구 주변으로 항상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조치로 앞으로 전국 모든 토지에 대한 사전 거래허가가 없어져,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 증명만 취득하면 되고, 임야는 해당 시·군에 일정기간 거주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는 등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게 되었다.

정부가 이와 같이 다양한 부동산 규제완화정책들을 발표, 시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매우 분명하다. 즉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정부가 의도하는 것은 극도로 위축된 경제를 어떠한 부작용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우선 활성화 시켜야겠다는 점이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거의 완전히 동결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개인이나 기업들의 자산감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물경제 부문에도 영향을 미쳐 건설업 등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일반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어렵게 만들고 있음은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여 자산의 감가를 막고, 거래를

촉진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수입을 증대시킴으로써 정부 재정을 확충하고, 기업의 토지매각을 원활히 해 구조조정을 촉진하며, 건설투자를 촉진하여 고용을 창출하며, 외국 자본의 부동산부문에 유입을 통해 국내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촉진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들이 과연 의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의 부동산규제완화가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회적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뿐이다. 대부분 지역의 토지의 소유는 그 지역의 몇몇의 지주와 기업인 들을 포함한 외지인들이다. 따라서 택지소유 상한제 및 토지초과 이득세의 폐지, 그리고 개발부담금제의 유보는 대규모 토지를 소유할 능력이 있는 계층이나 개발을 통해 엄청난 이득을 얻은 기업으로부터 세금환수를 포기함으로써 이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꼴이 된다. 즉 최근의 부동산규제완화 정책은 경기회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투기만 활성화하고 빈부격차를 더욱 조장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부동산규제완화정책은 무분별한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녹지 훼손과 도시의 확장을 유도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 5. IMF시대의 환경운동

98년초 한국의 환경운동 진영은 'IMF시대 환경운동의 과제'로 대량공급위주의 구조에서 환경친화적인 사회경제구조로의 재편'이라는 중요한 정책과제를 내걸고 환경운동을 진행시켜왔다. 그야말로 IMF 위기를 지속가능한 사회질서로 재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대규모 자연파괴를 대가로 한 대형국책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나타났던 고비용, 저효율 문제와 대규모 환경파괴와 환경비용 상승문제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이 중요한 운동과제로 되었다. 새만금간척사업, 영월 동강댐사업, 경부고속철도 사업 등 대규모 자연을 파괴하고 엄청난 세금을 낭비하는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백지화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구조조정에 의해 발생한 실업자군을 구제하고 사회의 공익적인 분야에 노동재분배를 하기 위하여 실업문제 해결이 환경운동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실업극복국민운동기구가 만들어지고 실업극복을 위한 각계의 기금이 모아졌다. 공공근로사업으로서 환경에 관련한 공익사업에 실업자군이 재배치되고 환경공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업극복, 녹색댐 건설, 생태계 보전이라는 목표하에 진행된 생명의 숲가꾸기 운동은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고 있는 실업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환경운동 사례라 할 수 있다. 환경분야에 관심과 지식이 있는 미취업 지식인들이 환경단체에 참여하여 자신의 활동경력을 쌓고 환경운동에 활력을 주는 인턴사원제나 자원봉사 시스템을 마련한 것은 초보적인 수준이나마 의미있는 활동이다.

## 6. 결론 : 제언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우리 경제는 후퇴를 겪고 있다. 자칫 경제침체와 자원부족을 이유로 환경보전에 소홀하게 되면 한국은 경제의 후퇴에 더하여 그 동안 누적되고 심화돼온 환경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한국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배려가 완전히 제자리를 찾은 것은 1990년대의 일이다. 이는 한국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전세계적으로 지구환경문제 등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보급과 관심고조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인구밀도가 높고 환경용량이 극히 제한적인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는 비슷한 소득수준의 여타국가보다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 한국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문제는 수십년간 누적돼 왔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진 90년대 후반까지도 계속 진행돼 오거나 더욱 심화돼 오던 것인데 반해, 환경문제에 대한 각성과 투자는 최근에 시작된 일이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대형 환경사고들은 그동안 성장과정에 누적되어 온 문제가 겹

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환경보전과 관련된 물적, 사회적, 경제적 기반은 이제 막 형성돼가고 있으며, 현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이 기반이 잠식 내지 파괴되면 이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정부의 환경예산지출도 상당한 폭으로 감소하여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려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민간의 환경지출의 대폭적인 감소이다. 민간환경투자는 민간환경지출은 거의 40%정도 전체 환경지출은 적어도 20%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같은 낮은 환경투자율이 앞으로 수년간 지속된다면 한국의 환경기반은 우려할 만한 잠식을 겪게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침체에 다른 생산활동의 위축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이 감소하여 환경오염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인 현상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와 같은 단기적 측면보다 중요한 것은 삼림, 해양, 생태계 등 천연자원의 급속한 잠식, 환경기초시설 부족의 심화, 환경관련 사회적 조직의 와해, 그리고 환경감시 및 감독 시스템의 약화 내지는 무력화 등 인프라의 부실화가 더욱 우려되는 점이다. 이제 막 형성되어 가동되기 시작한 물적 사회적 환경 인프라가 IMF 금융위기 기간 중 잠식당할 가능성에 대하여 유의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인프라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는 환경단체들이 재정난으로 활동이 위축되어 있다. 수많은 환경업체들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한 기업의 도산이 잇따르고 있다. 기업의 도산은 책임 있는 환경관리대상의 소멸이라는 측면이 있다. 예로서 도산한 기업이 방치한 폐기물이 심각한 문제로 이미 대두되고 있다. IMF 경제위기로 초래된 변화 중 환경에 긍정적인 측면은 대체로 단기적인 반면 환경에 부정적인 측면은 환경기반을 잠식하여 장기적 영향을 남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가 진정 경계해야 할 것은 과거의 타성에 젖어서 IMF사태를 핑계로 경제만을 살리려는 무모한 성장위주의 논리, 개발위주의 논리가 다시 돌아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의 경제구조와 정부구조 그리고 각종 환경관련 제도들이 환경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IMF 경제위기를 통해 DJ정부는 환경정책을 단순히 맑은 물 공급이나 쓰레기 처리 대책마련 정도로 생각해 오던 안일과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미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까지 약대권령에서 '환경선언' 및 수많은 개선대책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지만 정부 스스로의 실천의지 부족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던 것이다.

새로운 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스스로 국민의 환경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정책의 방향이 되는 지표에 '환경의 질 보장'을 우선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행정체계와 정책기조가 '환경친화적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 행정조직 체계를 기존의 경제개발 지향점에서 환경친화적 지향점으로 부분적인 개편을 추진해야 함과 동시에 국가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규제완화를 통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내수시장을 진작시키겠다는 발상보다는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살리는 친환경적인 사회경제체제를 어떻게 구축

할 것인가 하는 큰 틀에서 고민을 통해 정책을 이끌어 내야 한다. **環境保全**

<참고자료>

1. 환경부, 97, 98 환경백서
2. 한택환, 전환기의 환경정책상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9
3. 녹색연합, 월간 녹색희망, 1998. 1
4. 우석훈, IMF, 환경그리고 경제 : 환경문제의 해법, 현대환경연구원, 1998
5. 녹색연합, 자본의 세계화와 환경문제, 녹색연합, 1998
6. 이정진, 경제위기 극복과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 1998
7. 최병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국토이용, 1998
8. 박원홍, 'IMF에 따른 기업체 부도로 인한 산업폐기물 처리 현황',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 1999
9. 조선일보 언론보도, '빚더미 지자체', 1999. 7. 28字
10. 권철현, IMF시대 기업 환경투자 급감, 국정감사 자료, 1999

**2000 환경개선자금(재·특) 용자지원 안내**

환경정책법 제34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을 제6조의 2, 재정용자특별회계법 제6조 및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환경개선자금(재·특)용자지원요강이 발표되었다. 지원분야별 규모, 지원한도, 비율, 이자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원분야	지원규모	지원한도 및 비율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
방지시설 설치자금	500억원	개별방지시설	20억원 이하 (소요자금의 100% 이내)	변동금리 (현재 8.25%)	10년 이내 (거치기간 3년포함)	거치기간 경과 후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
		공동방지시설	30억원 이하 (소요자금의 100% 이내)			
기술개발 산업화 자금	40억원	기술개발자금	3억원 이하 (소요자금의 100% 이내)	8.25%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포함)	균등분할 상환
		산업화자금	10억원 이하 (소요자금의 100% 이내) (운전자금 3억원이하포함)			

궁금하신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관리공단(용자지원담당자, 전화번호 : 0331-223-632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